

2000년 경제정책방향(안)

본 자료는 지난 1월 17일 재정경제부에서 작성한 2000년 경제정책방향(안)을 발췌·편집한 것이다. <편집자주>

I. IMF 2년간의 경제정책 평가

- 97년말 IMF 경제위기 이후 다음과 같은 세가지 큰 방향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
 - ① 외환위기의 충격때문에 극도로 위축된 경제를 정상상태로 복원
 - ② 금융·기업·노동·공공부분등 4대부분의 구조 개혁과 적극적 대외개방을 통해 위기의 원인이었던 부실을 정리하고 개방적 시장경제질서의 틀을 확립
 - ③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을 통해 위기수습과정에서 고통을 겪은 국민계층간의 사회통합을 뒷받침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경제는 외환유동성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가운데 구조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

<외환 유동성 위기의 완전극복>

- 97년말 한때 가용외환보유고가 39억달러에 불과했었으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외자유치 등에 힘입어 IMF차입금(SRF) 135억달러를 전액 조기상환하고도 99년말 현재 사상 최고수준인 740억달러이상으로 확충
- 이에 따라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으며,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추락했던 국가신용등급도 99년초 투자적격수준으로 회복된 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대외신뢰도가 크게 개선

<실물경제의 회복>

- 경제성장은 98년의 $\Delta 5.8\%$ 감소세에서 벗어나 99년에는 10%수준에 이를 전망
 - 경기회복의 내용도 초기에는 소비중심이었으나 점차 설비 투자·수출증가로 전환되어 건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등 향후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예고
- 소비자물가는 수요측면에서 초과수요 상황에 이르지 않았고, 환율·임금 등 비용측면에서도 안정을 뒷받침하여 99년중 0.8% 상승에 그쳤음
- 경상수지는 국내경기의 빠른 회복으로 수입이 늘어났으나, 수출도 세계경제회복에 따라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연간으로는 26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 한때 178만명까지 증가했던 실업자도 그간의 지속적인 실업 대책 추진 및 경기회복에 따른 일자리창출(99. 11 현재 전년대비 취업자 118만명 증가)에 힘입어 99. 11월에는 97만명으로 하락

<구조개혁의 성과 가시화>

- 금융개혁의 추진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저금리 기조아래 주식·채권등 직접금융 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대기업-직접금융, 중소기업-간접금융」 중심의 선진국형 자금흐름 구조가 정착되기 시작
 - 금융대출관행도 종래 담보·외형 중심에서 신용·

수익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됨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유망한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

* 주식발행규모(조원) : (97)3.4 → (98)14.2 → (99)41.0

* 중소기업 은행대출증가(조원) : (97)4.2 → (98)0.7 → (99)17.5

* 신용대출비중(%) : (98말) 39.3 → (99.6말) 41.0

○ 기업부문에서도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재무 구조가 건실화되고 수익성위주의 경영관행이 정착되기 시작

- 특히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결합재무제표 도입, 회계공시 강화등 법과 제도의 개편에 따라 투명·책임 경영기반이 구축

* 제조업평균부채비율(%) : (97말)396.3 → (98말)303.0 → (99상)247.2

* 제조업매출액대비 정상이익률(%) : (97상) 1.4 → (98상)△0.4 → (99상) 4.2

○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면서 평생직장보다는 평생고용의 관념이 중시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 위원회를 통하여 노사간 대화의 장이 마련

○ 정부부문에서도 조직과 기능의 개편으로 행정규제가 대폭 축소되고 공식사회에 경쟁의 원칙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으로 경영 능률이 개선되기 시작

■ 그러나, 이와같은 경제회복과 구조개혁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

○ 지금까지의 개혁은 하드웨어 위주로서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관행의 개선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요청되는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중점을 둔 제2단계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또한 최근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악화된 소득분배구조가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재정적자가 늘어나 국가채무가 증가

- 다만, 이 과정에서도 세입증대분을 적자감축에 사용하는 등 재정건전화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는 축소되고 있음

* 국가채무(조원, GDP대비 %) : (97) 65.6(12.0) → (98)87.6(19.5) → (99)107.7(22.2)

* 재정적자(GDP대비 %) : (99 당초예산) △5.1 → (99추정) △3.0

II. 2000년대내의 경제여건

1. 대외여건

■ 세계경제는 일본등 아시아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됨으로써 99년보다 다소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교역량도 높은 신장세가 예상

○ 다만,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등 불안요인도 상존

세계경제성장률

(단위: %)

	98	99	2000
- 세계경제성장률	2.5	3.0	3.5
· 미 국	4.3	3.7	2.6
· E U	2.8	2.0	2.7
· 일 본	△2.8	1.0	1.5
· 아시아	3.7	5.3	5.4
- 세계 교역신장률	3.6	3.7	6.2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9. 10

■ 국제금융시장은 국제 자본이동의 급속한 변화추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대

○ 엔/달러환율은 일본경제 회복, 미국경제의 성장둔

화등 엔화 강세요인이 있으나 지나친 강세현상은 일본의 경제회복과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국제적 인식

- 금리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에 따라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아시아 금융위기가 국제금융질서의 미비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새로운 국제금융질서(new financial architecture)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

-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의 감산합의 등으로 99년 8월 부터 배럴당 20달러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원유 수요가 많은 동절기 이후에는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것이 미 에너지정보국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전망이나 감산합의 지속에 따른 불안정한 요인도 상존
 - 기타 원자재 가격은 세계 경제회복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여 99년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

	98	99	2000
-평균유가(\$배럴) ¹⁾	12.8	16.4	20~22
- 기타 원자재(% ²⁾)	△15.6	△7.2	3.4

주 1) 각 기관 종합(99. 11) 2) IMF (99. 10)

- 한편, 질적인 측면에서 세계경제는 통합추세가 가속화되고 M&A의 활성화등 기업간 경쟁도 격화될 전망이며, 지식화 · 정보화 · 디지털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에 대비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강화될 전망
 - 이와 함께 WTO 뉴라운드 협상 등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한층 진전될 전망

2. 대내여건

-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을 토대로 경제 각부문의 경쟁력이 개선되고 중소 ·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는 등 새로운 활력이 시작되고 있음

- 그러나, 경제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식 · 정보화를 통해 세계일류경제로 가는 데는 아직 미흡한 수준

- 한편, 최근의 급속한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물가불안, 대우문제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총선 등의 정치일정에 편승하여 일부 부문에서 구조개혁의지가 이완되는 현상도 예상됨
 - 특히 위기수습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한꺼번에 회복하려는 보상심리가 분출될 경우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고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상존
 - ◇ 금년은 새천년에 우리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확고히 구축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할 역사적 시점임
 - ◇ 이를 위하여는 구조개혁을 한층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요청됨

III. 2000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 ◇ 2000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우리경제가 IMF체제에서 벗어나 21세기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운용틀을 구축하는 원년임
- ◇ 따라서 2000년의 경제정책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안정기조를 다지고 구조개혁을 완결하는 한편, 새천년에 부응하여 세계일류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음
- 첫째, 유연한 거시경제정책 운영을 통해 경제안정기조를 확고히 정착
- 둘째, 그간의 구조개혁이 우리경제에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확립
- 셋째, 「일과 인간개발」에 중점을 두는 생산적 복지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넷째, 지식기반경제로의 운용을 전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

다섯째,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WTO 뉴라운드등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대비하여 국제경제 협력을 강화

IV. 주요 정책과제

1. 경제안정기반의 정착

◇ 경기회복 추세의 가속화에 따른 수요증대, 경기회복과 구조개혁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 문제 및 유가 등 비용 측면에서의 인플레이 압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음

◇ 그러나 물가안정이 확실히 정착되어야 시장경제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되어 대외균형이 유지되며,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안정기반의 구축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임

◇ 따라서 금년에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뿌리뽑고 굳건한 물가안정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거시경제운용을 통해 소비자물가를 3%이내, 장기금리를 한자리 수로 안정시키도록 하겠음

○ 실물경기·금융시장·재정집행 등 경제상황을 정확히 진단

○ 경제안정기초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을 적절히 조합·운영

- 수요측면에서 인플레이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

- 통화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신용정책을 적절히 수행

○ 자금시장측면에서 채권시장을 활성화

○ 비용측면에서의 인플레이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

◇ 금년도의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저물가-저금리」 기조가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음

(1) 유연한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 실물경기·금융시장·재정집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대 종합 분석이 가능한 진단체계 구축

○ 경기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진단을 위하여 민관 합동의 협의채널 마련

- 재경부, 한은, KDI, 전경련 등 정부, 연구기관 및 재계가 참여

○ 국제금융센터 기능의 강화 등을 통하여 금융·외환시장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시스템을 강화

○ 효율적인 국가채무 관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2000년 상반기까지 국가채무관리 시스템을 구축

■ 선진국형 「저물가-저금리」기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 조합(policy mix)을 적절히 운영

○ 재정은 적자감축에 중점을 두어 조속한 균형재정 회복을 도모

- 재정규모 증가를 억제하여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99년 GDP대비 적자규모는 3.0%로 추정)

· 경기가 잠재성장률 경로를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통합재정수지의 추가 긴축방안을 강구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시행·연차별 재정적자 관리 목표를 설정·운영하고 세제잉여금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

-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과세기반의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하여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

○ 통화는 한국은행이 정부와 협의하여 설정한 물가 목표에 맞추어 통화신용정책을 적절히 수행

- 통화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예:에너지, 농산물 등)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을 전체 물가목표와 함께 제시하여 물가안정에 주력

* 근원 인플레이션 목표: 2.5±1%, 전체소비자물가 목표: 3% 이내

-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과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의사전달체계를 한은과 협의하여 마련
- 정부는 세입증대시 국제공급물량을 축소함으로써 금리의 안정을 지원
- 자금시장에서 대우, 투신 등 마찰적 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저물가-저금리」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장기금리를 한자리수로 안정
 - 기업의 투자확대시 필요자금이 주식시장 등 직접금융 시장을 통해 조달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활성화
 - 채권매매 전문증권회사 및 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Inter-Dealer Broker)설립, 채권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을 통해 채권시장을 활성화하여 금리안정을 유도
 - 대규모 자금수요가 수반되는 시기를 미조정(fine-tuning)함으로써 일시적 요인에 의한 금리불안을 사전에 예방
 - 채권안정기금은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거시경제정책 조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 경제정책조정회의, 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활용
- 외환시장의 안정을 통한 대외균형기반 구축
 - 해외투자펀드의 활성화, 외평기금 활용 등을 통하여 외환수급의 안정기반 마련
 - 외채감축 및 외채구조의 지속적 개선을 통하여 순채권국 기조를 정착
 - 단기자금 이동과 외채규모등을 감안하여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충

(2) 비용측면에서의 인플레이 요인 관리 강화

■ 원자재 가격 불안·국제유가 등 외부적 요인에의 대비

- 농산물, 국제원자재 가격불안에 대비하여 농안기금(2조 3천억원), 정부비축자금(2,400억원)등 정부의 비축·방출 사업 및 할당관세 등을 활용하여 가격안정을 도모
-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철저한 경영혁신으로 원가상승 요인을 최소화하고, 요금조정과정에서의 소비자참여를 내실화하여 안정적으로 관리
- 국제유가 변동은 국내 유가에 바로 반영하여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이상급등시 유가완충자금의 활용방안 등 강구

■ 시장기능에 의한 저물가구조 정착 유도

- 판매자 가격표시(open price)제도의 정착, 가격과 피형 신투통업체의 확산 등을 통해 경쟁 촉진을 유도
- 생산성향상 범위내에서 임금을 인상하도록 하여 소비자가격에 임금인상요인을 전가시키는 임금협약을 자제하는 분위기 조성
- 농산물 직거래 확대 등 농산물 유통개혁을 가속화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유통체계 구축

2. 제2단계 구조개혁의 추진을 통한 시장경제질서의 틀 확립

- ◇ 그동안 국민들이 합심하여 구조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온 결과, 제1단계 구조개혁은 완료된 상태
- 구조개혁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개혁은 법과 제도의 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
- ◇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의식과 관행의 개선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 중점을 둔 제2단계 구조개혁을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
- 이를 통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체제를 완성하여 세계일류경제를 실현해 나가는 한편,
- 더불어 잘사는 복지증진사책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 제2단계 구조개혁의 중점은,
- 금융구조조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전문성과 건전성을

지향하는 금융시스템의 정착

-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업경영관행이 정착되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
- 평생고용의 개념에 걸맞도록 노동시장 제도를 정비
- 깨끗한 지식정부를 구현하고 공기업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 ◇ 이러한 구조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수적임

(1) 금융개혁

- 지금까지 부실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부실채권정리 및 증자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크게 제고한 바 있으나, 아직 제도개혁이 실천관행으로까지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 건전성 확보와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위한 의식전환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 실천이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 특히 위험관리능력이 취약하여 위험회피 경향이 상존
- 따라서 금년에는 남아있는 금융구조조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하는 한편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금융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 개혁을 강화
 - 채권·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 정비 등 인프라를 확충
 - 금융기관의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신용대출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건전성 평가 기준시행 등 건전성 감독을 한 차원 더 향상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 겸업 확대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자생적 금융구조조정을 추진
 - 투신·부실 생보사 등 남아있는 금융구조조정의 완결 및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방안 마련

(2) 기업개혁

- 경제위기이후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그 규모에 관계없이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
- 기업도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따른 부채비율 목표달성을 위해 자구노력을 강화하거나 워크아웃에 의한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함으로써 재무구조를 현격히 개선

* 4대그룹 평균부채비율(%): (97말) 469→(98말)355→(99상) 252

-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달라진 법과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경영관행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
 - 작년까지의 기업재무구조개선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핵심역량강화 노력이 금융기관의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금융건전성 감독을 강화
 - 기업갱생제도로서 워크아웃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퇴출제도의 선진화 도모
 - 기업내부에서도 무분별한 사업확장, 한계 계열사 지원 등 주주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투명한 기업지배구조관행을 확립하고 회계제도를 정비
 - 부당내부거래 감시 등 시장경쟁체제의 확립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

(3) 노동부문 개혁

-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 개념으로의 전환 및 임시·일용직의 확대 등 고용방식의 변화에 맞추어 노동시장의 제도를 정비
 - 근로자파견제 등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노동 시장에서 정착되도록 유도
 - 근로시간 및 임금·퇴직금제도를 노동시장의 유연

성과 근로자복지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선

- 경제회복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인한 노사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원만한 임금교섭 지도
 - 일률적인 임금인상보다 기업성과에 따른 이익배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유도
 - 생산적 신노사문화 창출 운동에 노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지원

(4) 공공부문 개혁

- 불필요한 조직과 업무를 털어내고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기반구축에 중점을 둔 그동안의 공공부문 개혁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면서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운영시스템을 개선
 -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
 -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건축·소방·환경 등 국민과 접촉이 빈번한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개선
 - 국민의 불필요한 시간·노력 소모를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원 반으로 줄이기」 추진
- 공직사회에 창의와 경쟁이 확산되도록 인센티브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
 - 연봉·성과급제도를 정착시키고 공무원 급여가 민간임금과 연계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보수결정시스템을 개편
 - 개방형 직위제도(현재 38개기관, 130개 직위선정)의 차질없는 시행
 - 공무원의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의 자율적 능력(예:어학, 컴퓨터) 개발기회와 교육기관 선택권을 확대
 - 특히 공무원과 군장교의 정보화분야 등 전문교

육을 강화

- 정부의 운영시스템을 혁신하여 지식정부를 구현
 - 지식공유시스템을 확립하고 부가가치 있는 일에 전념토록 하는 등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 특별회계·기금 및 관련 목적세를 정비하고, 성과주의 예산 및 복식부기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재정관리 제도를 개편
- 공기업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
 -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시 구조조정 이행여부에 대한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등 공기업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공기업 구조조정을 촉진
 -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
 - 민영화대상 공기업의 자율경영체제를 강화하되,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 민영화 대상 공기업중 기업갱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도 민간부분과 동일한 탈락기준을 적용하여 파산등의 절차로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3.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현

- ◇ 지난 2년간 IMF 위기 수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는 경기회복과 생산적 복지대책의 추진으로 99년 1/4분기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까지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지니계수 : 한국(99.1/4-99.3/4) 0.333-0.310, 미국(95) 0.344, 대만(92)0.312
- ◇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복지도 증진시키는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현이라는 분명한 복지모델을 추구하고 있음
 -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정책에 더하여 중산, 서민층

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이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

- 금년말에는 소득분배가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고, 2~3년내에는 OECD국가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을 전망
- ◇ 이를 위하여 금년을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생산적 복지체제」를 실천하는 원년이 되도록 해 나가겠음
- 중소·벤처 기업, 문화·관광산업 등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
-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의 내실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
- 주택건설 확대·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삶의 질을 개선
- 디지털 경제시대에 걸맞도록 개인의 적응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제도를 혁신하는 등 평생교육에 상응하는 평생교육체제를 마련
- 세제·세정개혁의 착실한 추진과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촉진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

(1)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

-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2003년에는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
- 중소·벤처기업, 문화·관광, 정보통신 등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

(2)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차질없이 시행(2000.10)
 - 최저생계비(4인가구기준 월 93만원)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층(2000년 154만명)에 생계급여를 지급하되, 자산조사를 합리적으로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제고
 -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충(99년 4,200명, 2000년 600명 증원)하고, 시군구 행정전산망과 노동부 work-net 등 관련 정보망을 연계

■ 4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을 내실화

- 의료보험 관리부문 통합(2000. 7. 1)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국민연금을 내실있게 운영
 - 직장의보간 통합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되,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
 - 국민연금 가입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고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직장 가입자의 편입을 검토
 - 민간위탁 시범사업의 추진, 운영성공에 대한 외부평가제도입 등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투명성을 제고
- 2000.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5인이상에서 모든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확충을 위하여 4인이하 영세사업장의 가입을 독려

■ 불완전 취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기록 및 근로경력을 기록하는 고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적용을 확대
- 주택자금, 의료비지원 등 각종 근로자 복지시책의 적용을 추진하고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도 강화

(3) 중산·서민층의 삶의 질 향상

- 2002년까지 주택보급율 100% 달성을 위해 2000년중 주택 50만호(99년 36만호)를 건설하되, 12만호(99년 9만호)는 임대 주택으로 건설하여 내집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
 - 근로자주택자금 지원대상을 저소득 근로자와 서민으로 확대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구입가격의 1/3, 전세금은 1/2수준으로 상향조정
-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산형성, 종업원지주제 활성화 등 근로자복지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 문화예산을 정부예산의 1%이상으로 확충하여 문화·생활체육·관광레저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등 여가생활을 향상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충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출산·육아비용의 사회적 부담방안 마련 검토
- 경로연금 지급액을 상향조정(2→3만원/월)하고, 노인 전문인력은행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취업을 지원
-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확대(61→77천명)하고 장애인 생상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및 직업재활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 농어민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상호금융(호당 1천만원 한도)에 대한 부채이자를 절반으로 낮추고 연대보증 부담도 해소

○ 무공해 천연가스버스의 도입(2000년중 1,500대), 4대강 유역의 수질개선 대책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

○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응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제도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제고하고, 소비원의 금융·법률·의료 등 전문서비스 분쟁조정기능을 확충

(4) 일할 수 있는 능력의 개발

■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OECD 국가수준으로 제고

○ 2002년 목표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올해안에 완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보화 능력을 획기적으로 배양

- 모든 교사와 전교실에 컴퓨터 1대씩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한편,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 교습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인터넷 사용료도 5년동안 전액면제

○ 교사의 위상과 사기를 제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등 학습환경도 개선

○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교생 40만명에게 학비를

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대학생 30만명에게 장기저리로 학자금 융자

■ 평생고용이 가능하도록 평생교육시스템을 확충

○ 2000.3월 「평생교육법」의 시행에 맞추어 원격대학·사내대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활성화

■ 수요자 위주로 훈련제도를 개선

○ 정보통신·유통 등 지식기반산업 위주로 공공직업훈련의 훈련직종을 개편하고 훈련바우처제도를 확대 시행(충남북→전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훈련체제 구축

○ 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체계적인 자립·자활지원체제를 구축

(5) 소득분배의 개선

■ 세제·세정 개혁의 착실한 추진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

○ 금융소득에 대한 각종 우대세제를 재검토·정비하는 등 2001년 시행예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

○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편 내용을 차질없이 시행

○ 세정의 정보화·과학화에 주력하여 탈루소득에 대한 조사를 강화

■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촉진

○ 우리사주조합, 사적연금제도, 장기주택저당제도의 활성화 및 성과배분제 확산등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

4. 지식기반경제로의 운용 틀 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 ◇ 그동안 추진해 온 재벌개혁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경영의 투명·책임성 제고 등 지배구조개선 및 핵심역량에의 집중 등을 통하여 재벌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
- 기업의 수익성 증가를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 투자의 확대로 연결시켜 우리경제 성장의 일익을 계속 담당
 - * 제조업경상이익률(매출액대비, %) : (97말)△0.3→(98말)△1.8→(99상) 4.2
 - * 상장사 경상이익(조원):(97상) 3.2→(98상)△7.9→(99상)8.9
- ◇ 이와함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인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데 주력
- 경제의 지식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고, 문화·관광산업 등 새로운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산업전반의 지식기반화를 추진
- 중소·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활성화
- 제조업의 구조개혁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
- 주요 공항·항만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
- ◇ 또한 21세기 디지털 경제로의 운용을 전환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정책과제 발굴 등을 위해 민간합동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추진전략을 마련

(1) 경제의 지식정보화 촉진

-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부응하여 정보통신기반을 구축
 - 초고속통신망을 앞당겨 구축(2010→2005년)하고 현재보다 정보유통속도가 1,00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을 개발
 - 정품사용 촉진 등 S/W 산업의 내수확대를 도모하고, 인터넷, 게임 등 전략분야 S/W의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등 S/W산업을 육성
 - CDMA, IMT-2000등 이동통신 관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전자상거래의 육성·지원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 전자상거래를 기업간 거래 및 사이버 무역으로 확산시켜 산업경쟁력을 제고
- 문화·관광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 게임·애니메이션 등 고부가가치분야의 육성을 위해 「게임종합지원센터」의 확충 및 「애니메이션 지원센터」 신설
 - 문화산업 및 영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2000년 500억원 출연, 2003년까지 5,000억원)과 영화진흥기금(2000년 500억원 출연, 2003년까지 1,500억원)재원을 확충
 -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2000년 305억원) 착수 등 새로운 관광자원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 부가가치가 큰 디자인 개발을 지원
 - 「산업기술자금」에서 수출유망품목·중소기업 등의 디자인 개발을 확대 지원(2000년 500억원)
 - 디자인니트(Designit)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제적인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 산업전반의 지식기반화를 산업특성에 맞추어 추진
 -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신산업 및 미래산업(생명공학, 환경산업등)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 등 기존 주력산업도 계속 성장동인을 유지·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 지식기반화의 핵심요인인 전문인력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특수분야 전문연수원, 기업의 자율적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 대책을 마련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

■ 그간의시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 창업법인수(7대도시 기준)는 98년에 약 2만개에서 99년에 약 3만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도 99년수준을 유지할 전망

○ 창업투자조합(벤처펀드)에 대한 정부출자를 크게 확대하는 등 민관합동으로 총 1조원규모의 벤처자금을 조성

- 금년말까지 1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10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창업보육센터(99년 142개 → 2000년 222개), 소상공인 지원센터(99년 30개→2000년 50개)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시설의 설립을 확대

○ 개정된 스톡옵션에 대한 회계처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보완을 지속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율화

○ 금년중 「중소기업관련 예산사전협의기구」를 중기특위 산하에 설치하는 등 중기특위를 활성화하여 각 부처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유기성을 제고하고 정책조정기능을 강화

○ 중소기업 관련법령의 정비, 중소기업 기초통계의 확충 등 기반 인프라의 내실화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자금의 활용상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

○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제조업에서 지식집약형 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

(3)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을 촉진

○ 2002년까지 R&D 예산이 정부예산의 5%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R&D 예산을 단계적으로 증액

* 99년 30,688억원(3.7%) → 2000년 35,312억원(4.1%)

○ 첨단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범

부처적으로 실시하고 대학 등 기초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 특히 반도체·생명공학·영상·신소재 등 첨단 부문을 중점지원

○ 기술의 이전·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소를 설립·운영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종합계획」추진(2000.1 기술이전촉진법 시행)

○ 과학기술인력이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자금으로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로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를 연구개발자에게 배분

■ 새로운 부품·소재산업 육성시스템을 구축

○ 부품·소재 생산업체가 A/S 및 보수용 자동차 부품을 직접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생기반을 확충

○ 「부품·소재 기술개발 5개년 계획(2000~2004)」에 따라 차세대 핵심 기술력 확보에 재원을 집중 투입

○ 개발된 부품·소재의 신뢰성 평가체제, 공공연구기관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부품·소재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 설비투자의 확충노력을 가속화하되, 제조업은 구조개혁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설비투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및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각각 6개월 및 1년간 연장 운영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 자발적 협약(VA)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

○ 전력, 가스산업 등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을 차질없이 추진

(4) 인프라의 확충과 지방경제 활성화

■ SOC 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확충

○ 부산·광양항, 인천공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세·부가세등이 면제되고 물류활동도 자유로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단지를 조성하여 세계 유수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유치

○ 자금조달상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SOC 민자사업을 활성화

- SOC 민자법인에 대한 출자 대기업의 지급보증 허용, 인프라펀드 설치(5,000억원)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 확대(사업당 300억원→1,000억원)

○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00~2004년)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투자배분체계 구축

■ 지방경제의 활성화

○ 기 마련한 기업의 지방이전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

- 지방이전에 따른 제반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종합센터」를 구성·운영

- 지자체의 적극적 기업유치노력을 유도하고, 이전에 따른 추가 애로요인도 조기에 파악·해소

○ 지역균형발전의 촉진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 지역균형발전시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균형발전 기획단」을 설치하고,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균형발전 3개년 계획」을 마련

-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계획을 적극 지원

* 대구 섬유산업(950억원), 부산 신발산업·광주 光산업·경남 기계산업(1,200억원)

(5) 디지털경제에의 준비

○ 21세기 디지털 경제로의 운용틀 전환을 위한 전략 마련

○ 법과 제도의 개선 등 필요조치의 점검, 정책과제의 발굴등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중 민관합동의 협의체를 구성·운영

5. 국제경제협력의 강화

◇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다른나라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인바, 이를 활성화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함께 국내고용창출 및 선진경영기법과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외환위기 파급시에도 안전판 역할을 담당케 할 필요

* FDI누계/GDP(97,%) : 한국(99) 7.4, 중국 23.5, 싱가포르 81.6, 말레이시아 38.1, 영국 21.5

○ 최근 국내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 사례를 보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대부분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여 고용유지에도 기여

* 97년 외환위기 당시 직접투자 위주로 외자를 유치한 말레이시아는 차입위주의 우리나라에 비해 위기를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겪음

○ 앞으로도 첨단, 지식기반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 아울러 외환·자본자유화의 확대를 착실히 추진하되 해외 불안정요인에 대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 수출저변을 확대하며 해외투자도 활성화

○ G-20 및 WTO 뉴라운드 등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경제의 위상을 제고

○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 등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연구기관 협력 등 남북 경제협력도 활성화

(1) 대외개방의 확대

■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대형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민간전문가·지자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맞춤형 투자유치단」을 수시 파견하는 등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 저가의 임대용지 제공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엔고하에서 해외이전을 모색중인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 외환·자본자유화의 차질없는 추진

- 2000년말까지 개인의 경상지급 자유화, 잔존 자본거래 제한의 원칙적 신고제로의 전환등 제2단계 외환·자본자유화를 계획대로 시행
 - 다만, 국제금융질서 개편논의 등을 감안하여 단기 투기 자금의 이동을 억제하는 방안 강구
- 선물환시장 육성 등 외환시장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외환거래 규모 (99년 외환시장 일평균거래량 : 25억달러내외)를 확대하고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추진
- 해외요인의 불안정에 대비하여 외환·자본자유화에 따른 효과적인 보완대책을 마련
 -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
 - 외환전산망 및 조기경보체제(EWS)의 질적 수준을 제고
 - 외환자유화로 늘어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FIU) 구축

(2) 수출기반의 확대와 해외투자의 활성화

■ 수출시장 저변의 확충

- 위험도는 높으나 시장성이 큰 국가에 대한 연불수출을 선별적으로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거래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도 확대(수출입은행지원 자금 : 99년 7.8조원→2000년 10.5조원)
- 중동, 중남미 등 전략시장에 대한 플랜트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보험 확대 및 이자율 변동보험 등 신규 보험제도 시행
- 수출인큐베이터 내실화 등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강화
- 농산물에 대한 수출금융지원 확대(2000년 농안기금 4,000억원)

- 원산지 규정 위반 등 불공정 수입에 대한 점검체제 강화 및 산업피해구제제도 개선

■ 장기적인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역인프라의 확충

- 무역인프라의 체계적인 확충을 위하여 「무역인프라 확충 중장기 계획」 수립
- 사이버 무역기반 확충을 위한 무역절차 개선, 사이버 수출 상담회 개최 및 사이버 무역인력 양성 확대

■ 해외투자 활성화 시책의 강화

- 아시아지역 등 국외 투자를 전담하는 「해외인프라 펀드」설치 추진
- 대개도국 EDCF 자금지원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하여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 해외투자정보시스템(OSIS) 확충 및 투자환경조사단 파견등을 통해 해외투자를 촉진


(3) 국제경제질서 형성에의 능동적 대응

■ G-20, WTO 뉴라운드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 G-20 발족을 계기로 국제경제현안 및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우리 외환위기의 성공적 극복 경험을 반영하고 국제금융위기 방지책 마련
-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의 추가자금인출은 중지하되,
 - 전문성 활용 및 국제신뢰도 제고차원에서 정책 협의, 기술지원사업등을 중심으로 한 호혜적 협력관계로 재설정
- WTO 뉴라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대외 진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상하되,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의 폭과 속도가 완화되도록 대응
- 우리나라가 APEC 정상회담(99.9월)에서 제의한

「서울포럼」(2000년 3월) 및 ASEM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

- 동북아 경제협력 등 지역간·양자간 협력을 강화
 -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21세기 한·중·일 3국의 새로운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 한·중·일 정상회담시(99. 11) 합의된 연구기관간 공동협력 연구 및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등 한일각료회담(99.10)에서 합의한 한·일 경제협력증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 대외개방 확대 및 해외무역·투자거점의 확보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협정(BIT) 체결을 지속 추진
 - 지역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연구소를 개편하여 세계적인 지역연구소 설립·육성
 - 기후변화협약등 국제환경협약 논의에도 능동적으로 대응

-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 대북 경협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남북협력 기금법」 개정을 통해 경수로사업 재원 조달방안을 확정하는 등 남북 경협의 폭과 깊이를 확대·발전
 -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국책연구기관간 협의를 위한 구체화 방안 마련 

◇ 맺음말 ◇

- ◇ 지난 2년간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한 결과, 외환 유동성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었으며, 구조개혁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경기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
- ◇ 그러나, 향후 우리경제가 21세기 세계일류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위험요인과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

- 특히, 금년에는 물가·금융시장 불안 및 세계경제의 통합 움직임 등 대내외적인 위험요인이 잠복해 있음
- ◇ 따라서 새천년의 첫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금년에는 제 2단계 구조개혁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거시경제 운용방식의 선진화를 통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인을 발굴하고 생산적 복지체제를 구현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임
- ◇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 모두가 다시 한번 합심·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금년도 우리경제는 6%수준의 경제성장, 3%이내의 물가안정, 120억 달러 내외의 경상수지 흑자, 4%수준의 실업률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

〈참 고〉

〈 2000년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증감율, %)

	98	99.1/4~3/4	99전망	2000전망
○ GDP	△5.8	9.0	10수준	6수준
· 민간소비	△9.6	8.5	9	5~6
· 설비투자	△38.5	32.2	34	14
· 건설투자	△10.2	△10.5	△9	5
· 총수출	13.3	15.9	18	10
· 총수입	△22.0	28.6	30	16
○ 소비자물가상승률	7.5	0.6	0.8	3이내
○ 실업자(만명)	146	147	135	93내외
(실업률)	6.8	6.8	6.2	4수준
○ 경상수지(억달러)	406	192	260내외	120내외
· 통관수출(억달러)	1,323	1,147	1,442	1,600
(증가율)	△2.8	6.0	9.0	11.0
· 통관수입(억달러)	933	954	1,197	1,480
(증가율)	△35.5	25.0	28.3	23.6